	<p>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</p> <p>12.30(수) 14:00부터 보도 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
---	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,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,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, 조선해양플랜트과,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,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			
책 임 자	유재훈 팀장(2156-9961) 주환욱 과장(044-215-2750) 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 단희수 과장(044-203-4330) 김정희 과장(041-201-3504) 이상문 과장(044-200-5710)	담 당 자	김보균 사무관(2156-9964) 염철민 사무관(044-215-2754) 정두식 사무관(044-203-4284) 김등용 사무관(044-203-4333) 정수호 사무관(041-201-3507) 엄익환 사무관(044-200-5716)	
배 포 일	2015.12.30.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3매

**제 목 : 「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」 논의**  
-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☐ 2015.12.30.(수) 10:00 “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”에서 「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」이 논의되었으며, 안건은 별첨과 같음

<별첨>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

< 별첨 >

공개

##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

2015. 12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논의 경과 .....	2
III.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 .....	3
1. 조선 .....	3
2. 해운 .....	6
3. 석유화학 .....	10
4. 철강 .....	12
5. 건설 .....	14
IV. 향후 계획 .....	16
[참고] 기업구조조정 체계 및 추진현황 .....	18

## I. 추진 배경

- 美 금리인상,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**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**, **신흥국의 부채문제도 커지는 상황**
  - 美 금리인상('15.12월) 이후, 추가 인상속도 등에 따라 **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**
  - 中 성장세 둔화 및 구조개혁(투자·수출 → 내수) 등은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의 **성장 하방요인**
- 국내적으로는 **경기부진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반적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도 증대**
  - **한계기업 수가 증가**('09년 2,698개 → '14년 3,295개, 597개 ↑)
  - 특히, 수익성·재무건전성 등 영업실적 및 채무상환측면에서 **정상기업과 한계기업간 양극화 심화**

< 전체기업과 한계기업의 재무·영업 현황(한국은행) >

구 분	전체기업		한계기업	
	10년 → 14년	변화율	10년 → 14년	변화율
이자보상배율	5.1 → 3.9	1.2p ↓	1.0 → △0.7	1.7p ↓
매출액영업이익률	7.1% → 4.6%	2.5%p ↓	4.1% → △3.6%	7.7%p ↓
부채비율	98.4% → 79.2%	19.2%p ↓	200.0% → 222.5%	22.5%p ↑

※ '09년부터 영업을 지속해온 외부감사대상 기업 15,352개 기준 / 한계기업 2,051개

◆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**경제 활력을 제고**하고  
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**리스크 관리**를 위하여

➡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**최대한 신속히 마무리**할 필요

## II. 논의 경과

- 최근 조선·해운 등 경기 민감형 산업의 경우 국내외 공급과잉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
- 그러나, 산업 차원의 구조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한계
  - 부실우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만으로 근본적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고 지역경제,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
  - 은행도 기업 구조조정시 당장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므로, 한계기업에 대해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
- 이에 따라,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「정부내 협의체」를 구성하여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
  - 그간 차관금 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통해 조선, 해운, 석유화학, 철강, 건설산업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
- 「정부내 협의체」에서 논의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기초로 하여,
  - 채권단 및 업계는 기업별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추진
-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,
  -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'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' 제정과
  -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, '기업구조조정 촉진법' 일몰기한('15년말) 연장을 추진 중

## III.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

### 1 조 선

#### 1. 현황 및 전망

- 금융위기 이후 상선 발주가 줄고 고유가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증가했으나, 최근 유가하락으로 해양발주 급감
  - 최근 우리 주력선종(대형 컨테이너선, LNG운반선 등)의 발주는 크게 감소하지 않아 외형적 수주규모는 유지하였으나,
    - \* 수주량·점유율(백만CGT,%) : ('13) 18.7(35.3) ('14) 12.6(30.8) ('15.上) 5.8(42.7)
    - 수익성 없는 무리한 수주는 기업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
    - \* 대형3사 영업이익률 추이(%) : ('12) 5.6 ('13) 3.9 ('14) △2.6 ('15.3Q) △13.7
  - 中·日은 벌크선 등 기존 주력선종의 시장침체에 대응, 전문·대형화 등으로 우리 주력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중
    - \* (中) 우량조선소(White List) 발표, (日) 대형컨선 등에 특화된 전문대형화 조선소 출범
- 국내 조선사들은 시황변화에 대응한 물량확보 노력 과정에서 역량 대비 무리한 수주 물량 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
  - 대형3사는 해양플랜트를 집중 수주했으나, 핵심역량 미흡 → 납기지연 →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계속
  - 중소조선사는 각 사별로 채권단 관리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, 고비용·저수익 구조 지속으로 경영정상화 지연
- 향후 조선업은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수주감소가 예상되나, 靑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 증가로 소폭의 부문별 시황개선 전망
  - 대형3사는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기존에 강점을 지닌 고부가 상선에 집중함으로써 '16년부터 영업이익 개선 기대

## 2. 구조조정 방향

- 과잉공급·과당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
  -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, 정상화 추진 곤란시 M&A·청산 등 사업정리 진행
  -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 추진
    - 대형사·중견사 공히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고,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특화
  - 구조적 과당경쟁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 유도

< 조선 등 수주사업 수익성평가 기구 신설(11.10일, 부총리주재 간담회) >

-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조선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
- 이를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“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” 설치(16년 상반기) 추진

## 3. 주요 조선사별 채권단 대응현황

### < 대우조선해양 >

- 산업은행, 경영정상화방안 발표('15.10.29)
  - '16년까지 산은·수은이 총 4.2조원 유동성 지원 및 산은 책임하에 2조원 이내 자본확충
  - 회사는 유휴자산 매각,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(총 1.85조원 규모) 등의 자구노력
- 회사와 채권단은 '15년 신규자금 1조원, 유상증자 4,142억원 등 정상화방안을 계획대로 이행 중
- ※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등 여타 대형사는 원가절감, 수익성 위주 수주 집중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 중

### < STX조선 >

-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 협의 중(연내 완료)
  - 다운사이징을 통해 탱커·LNG선 특화 중소조선사로 전환 추진
  - 인력감축(34%), 임금삭감(10%), 비영업용자산(800억원) 매각 등 자구노력
  - 채권단은 추가 신규자금 지원없이 기결의 지원예정자금 잔여분(4,530억원)의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유동성 지원

### < 성동조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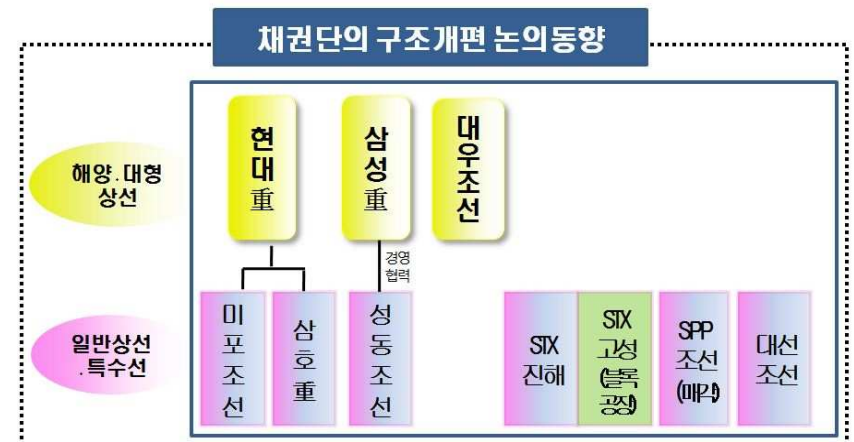
-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('16.1월~)을 통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추진중
  - \* 15% 인력감축 및 비핵심자산 매각(약 2,500억원) 등

### < SPP조선 >

- 채권단은 매각주간사를 선정('15.10월)하고 M&A 추진중
  - \* '16.1월중 본입찰 실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

### < 대선조선 >

- 소형 탱커·컨테이너와 여객선 특화 조선사로 생존 모색 중
  - \* 생산공정 일원화(3개 공장→ 2개 공장 매각·청산 및 제3공장 일원화 등) 및 여객선 시장 진출 추진중



## 2 해운

### 1. 현황 및 전망

- 최근 세계 해운업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, 인수·합병 등 글로벌 해운시장 재편도 가속화
    - 세계 교역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면서, 물동량 증가가 둔화되고,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 약세 지속
      - \* 교역 성장률/경제 성장률 : 2 상회(86~00) → 1.3 수준(01~10) → 0.9 수준(11~14)
      - \* SCFI : ('10) 1,367 → ('12) 1,254 → ('14) 1,072 → ('15.平) 732
    - Maersk(1위)는 비상경영안을 발표(11.4일)·실행중이며, CMA CGM(3위)·NOL(12위)간 합병(12.7일) 및 중국 양대 선사간 합병 추진중
  - 국내 대형 해운사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장기간 해운업 침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 지속
    -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과 시장안정 P-CBO 지원으로 차입금 상환 등 단기 유동성문제 해소에 주력
    -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고효율·에코쉽 신규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어 원가 경쟁력 열위 상태 지속
  - 향후 해운업은 선복량 과잉 해소\*와 운임회복에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,
    - 국내 해운사는 단기적 유동성 부족 문제와 근본적 선대 경쟁력 확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
      - \* '16년 선복량증가율(4.8%) > 물동량증가율(4.3%) → 시황 회복 지연 예상(Clarkson)
- ※ 중소형 해운사는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일어나는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 진행 중

### 2. 구조조정 방향

- ◇ 현재의 선대구조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적 선사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“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” 추진
- ◇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하되
  -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희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추어 처리

- 해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‘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’ 실시
  - 민관합동의 ‘선박펀드’를 조성하여 BBC방식(Bare Boat Charter)\*으로 선박 신조 지원(☞ 세부 내용 별첨)
    - \* 용선 종료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(용선사)가 매각 및 선가하락 Risk를 지지 않고, 운용리스로 회계처리(부채비율 영향 無) → 해운사 선호
  -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(부채비율 400% 이하) 달성시에만 지원하여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도 유도
  - 초기 12억불 규모로 추진하되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
- 「운임공표제」를 강화\*하여 시장질서는 확립하고, 대형 선사들의 운임 Dumping 행위를 집중 단속·제재\*\*
  - \* 대상 확대(10개 항로, 35개 항만→ 전 항로, 전 항만), 운임 협상 범위 20%→40%로 축소
  - \*\* 불이행 및 차등 적용 선사에 과징금 부과, 등록 취소, 기항 금지 등
- 국적 선사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 유도
  - 부산 신항에 인근해 선사물량 우선처리를 위한 부두 마련
  - 국적 선사가 포함된 얼라이언스의 환적 물량 유치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간 환적화물 이동(ITT) 효율화 추진

□ **시황 변동 대응능력 강화**를 위해 **한국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**

- 운임변동 등에 따른 해운사들의 리스크 헷징을 위한 운임선도거래 시장 조성

□ **해운 기업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정보 공유 강화**

- 기업 부실이 산업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사간 채용선 현황, 해운 부대업 거래 연체 정보 파악·공유

**3. 채권단 대응현황**

□ 그간 업황 개선 기대속에 대형해운사의 자산매각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채권단 등은 시장안정 P-CBO 등 지원

- 해운사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

\* 자구이행('15.12월) : 현대상선 2.5/2.9조원(89.2%), 한진해운 3.0/2.5조원(122.9%)

- 채권단 등은 시장안정 P-CBO를 통해 시장차입금 차환('13.7월~) 및 운영자금 기한연장 등 지원

\* P-CBO : 현대상선 1조 432억원, 한진해운 8,387억원 등 총 1.9조원

\* 운영자금 등 : 현대상선 5,192억원, 한진해운 2,857억원 등 총 0.8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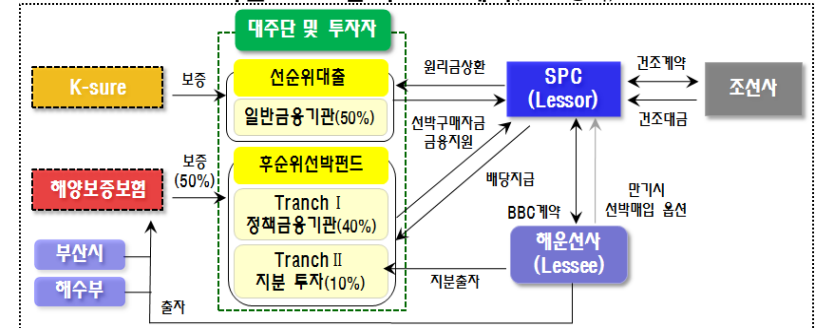
□ 그러나, **업황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한적인 자본확충 등 기존 자구노력과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정상화에 한계**

- ➔ 채권단은 해당 기업별로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자본확충·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유동성 문제에 대응 중

**<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>**

- 민관합동의 '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'를 조성하여 BBC방식(Bare Boat Charter)으로 선박 신조 지원(1척 발주시 각각 SPC 구성)

**< 지원프로그램 구조도 예시(BBC 방식) >**



- (지원조건) 해당 기업이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(부채비율 400% 이하)을 달성

- (지원대상) 투자심의위원회\*에서 결정하되,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대형·고연비 선박 신조를 우선 지원

\* 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참여

- (조성규모) 초기 12억불 규모 [※ 향후 수요 감안 확대]

- (투자자) 일반금융기관, 정책금융기관, 해운선사 참여

- (선순위) 일반금융기관(전체 조성규모의 50%)

- (후순위) 정책금융기관(전체 조성규모의 40%), 해운사(10%)

\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한국자산관리공사, 산은 캐피탈 등

- 해운사는 선박 펀드에 일정 지분(Equity, 10%) 투자

\* 통상 BBC 방식과 달리, 펀드 성사가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운사도 후순위 일부 참여

- (보증) 선순위는 무역보험공사가, 후순위는 해양보증보험이 일정부분(예 : 50%) 보증

### 3 석유화학

#### 1. 현황 및 전망

-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의 자급률 상승\*, 셰일가스 등 저가원료 기반 설비투자 확대로 경쟁 치열

\* 중국 석화품목 자급률 추이(%) : ('12) 70.7 → ('14) 79.1 → ('17°) 83.1

- 한편, 저유가의 영향으로 유가 탄력성이 큰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\*

\* 주요업체 분기별 영업이익률(%) :

('14.1Q) 3.9 → ('14.2Q) 3.3 → ('14.3Q) 4.2 → ('14.4Q) 2.5 → ('15.1Q) 6.2

- 품목별로는 합섬원료 분야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

#### < 품목별 업황 전망 >

- ① (기초유분) '17년까지 호조세 지속 전망, '18년 이후 시황 악화 가능성
- ② (중간원료) '13.下 이후 시황부진 지속 중이나, '17년 이후 개선 전망
- ③ (합성수지) '17년까지 실적 양호 전망
- ④ (합성고무)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
- ⑤ (합섬원료) 영업적자 시현 중, '18~'19년까지 공급과잉 지속 전망

- 특히, 합섬원료 중 TPA(테레프탈산)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공급 확대,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\* 등으로 사업여건 악화

\* 세계 TPA 수급 전망('13~'18, 연평균 증가율) : 생산설비 7.9%, 수요 5.4%

#### 2. TPA 분야 구조조정 방향

- 글로벌 공급능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으로, 수익성 악화 지속 전망

\* TPA 수익성 현황(손익분기점 \$200/톤) :

('11) \$223/톤 → ('13) \$74/톤 → ('15.1Q~3Q) \$84/톤

- '12~'15년간 국내업체들의 누적적자는 총 8,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

#### < TPA 업계 영업이익 현황('15.11월) >

(단위: 억원)

'12	'13	'14	'15°	계
Δ3,028	Δ2,244	Δ2,173	Δ1,005	Δ8,450

- 업계 자율적인 감산 또는 설비폐쇄 · 전환 추진 중

-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중국 · 일본 등 주요국도 생산설비 감축\*으로 대응 중

\* (일본) '16년까지 약 120만톤 감축, (대만) '15.3월 CAPCO社 80만톤 폐쇄, (중국) '15.3월 원동석화(320만톤) 가동중단

- 글로벌 가격경쟁력 상실, 수요회복 지연 등으로 TPA 분야 설비조정 등이 필요

-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

#### 3. 업계 대응현황

- 업계도 생산설비를 약 30%(약 150만톤) 감축해야만 수익성 회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식

- '15.7월 이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 중인 생산설비 조정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여 TPA분야의 구조조정 예정



## 4 철 강

### 1. 현황 및 전망

□ 중국발 철강수요 둔화와 공급과잉 심화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

○ 다만, 최근 자발적 사업재편, 일부 내수경기 회복, 무역 구제조치 등으로 국내업체들의 업황이 개선 중이며,

○ 2~3년 후 一帶一路(中)·아시아 인프라 건설 등이 본격화될 경우 업황이 다소 회복\*될 가능성

\* WSD Inside Track #144('15.10월), 세계 철강산업 동향(수출입은행, '15.9월) 등

□ 품목별로는 합금철\* 분야의 수익성 악화 전망

\* 철강 제련 과정에서 산소·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철강 성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부재료

#### < 품목별 업황 현황 및 전망 >

- ① (고 로) 별도의 설비조정 없이도 건실한 영업기반 유지 전망
- ② (전기로) 자발적 설비조정으로 가동률 증대 및 수익성 개선
- ③ (열연·후판) 전방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, 자발적 설비조정으로 '15년 영업이익 개선
- ④ (냉 연) 자동차 해외공장 신설 등으로 시황 개선
- ⑤ (통형강) 건설경기 호조, 무역구제조치 등으로 경영여건 호전
- ⑥ (합금철) 수요부진으로 '14년 이후 영업적자 시현 중

## 2. 합금철(망간합금철) 분야 구조조정 방향

□ '08년 이후 수요 대비 생산설비확대('07년 38만톤 → '15년 89만톤) 폭이 과다하여 현저한 공급과잉 상태

○ 전방산업 부진 장기화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, 개별업체들의 영업부진도 심화될 가능성

- 특히, 최근 원료가격 대비 판매가격 급락\*으로 수익성 악화

\* 합금철 원석 수입가 하락(10~20%) < 합금철 판매가 하락(20~40%)

○ '14년 업계 평균영업이익 적자전환 이후 적자폭이 심화 되고 있으며, 일부 업체들은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

< 망간합금철업계 영업 실적('13~'15.3Q) >

매출액(조원)			영업이익(억원)			영업이익률(%)		
'13	'14	'15.3Q	'13	'14	'15.3Q	'13	'14	'15.3Q
1.5	1.4	0.9	207	△47	△645	1.4	△0.3	△7.0

□ 경쟁적 설비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이 장기화되면서, 망간합금철 분야 설비조정 등이 필요

○ 정부는 업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(89만톤→50만톤)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### 3. 업계 대응현황

□ 업계도 향후 수요전망 등을 감안할 경우, 생산능력을 약 40%(약 40만톤) 정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

○ 현재까지 11만톤의 설비폐쇄를 완료했으며, '15.9월 이후 추가적인 설비감축 방안을 망간합금철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중



## 5 건설

### 1. 현황 및 전망

□ 국내시장은 '0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

○ 특히 '15년중 건설투자는 성장폭이 지속 확대\*되고 있으며, 건설수주는 1~3분기 누적액(95.7조원) 기준 역대 최고치

\* '15년 건설투자 : (1분기) 0.6% → (2분기) 1.6% → (3분기) 5.2%

<건설투자 및 수주실적>

(단위: 조원, 전년(동기)대비 변동률(%))

구 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 3Q(누적)
건설투자	208.2 (3.5)	200.6 (△3.7)	193.8 (△3.4)	186.1 (△3.9)	196.3 (5.5)	198.4 (1.0)	149.0 (2.6)
건설수주	109.1 (5.0)	89.8 (△17.7)	95.3 (6.1)	89.4 (△6.2)	77.9 (△12.9)	89.8 (15.3)	95.7 (50.9)

\* 건설투자는 실질(2010년기준, 한은), 건설수주는 상위 54% 종합건설업체 대상(통계청)

➡ 금년말까지는 회복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나,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

○ 주택 부문은 상승세를 이어가나 소폭 둔화될 수 있으며, 비주택은 혁신도시 등이 마무리되면서 소폭 증가 전망

○ 토목 부문은 건설수주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건설투자도 금년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□ 해외시장은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세 둔화중이며,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액(10월말, 377억불)도 지난해의 71% 수준

➡ 향후 해외시장 성장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로 전망되며, 수주는 도급공사 위주에서 PPP(민관협력사업)로 전환 추세

○ 지역별로 중동은 유가하락 등으로 보합세, 아시아 남미는 주요 개도국 성장둔화로 성장세 소폭 둔화 예상

○ 특히, 플랜트 분야는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며, 저유가 현상 지속시 가속화 우려

### 2. 구조조정 방향

◇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

□ 감소하는 시장규모에 맞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

○ 입찰제도의 변별력 및 보증의 선별 기능 강화로, 우수업체는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환경 조성

-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,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('16년 본격시행)

- 부실업체 실태조사\* 및 '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'을 통해 부실업체 적발 및 퇴출

\* 등록증 불법대여,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등

○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(KOIF)\* 조성,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관련 대책\*\* 추진

\*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인프라사업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(KIC)의 투자자금 20억불을 「코리아 해외 인프라펀드」로 설정('15.10.23)

\*\* 해외건설·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('15.11.10)

### 3. 채권단 대응현황

□ 일부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잠재적 위험 대비 차원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중

<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현황 >

- 대기업 신용위험평가('15.7월, 12월) : 건설사 14개사(C등급 2개사, D등급 12개사) 선정
-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('15.10월) : 건설사 8개사(C등급 1개사, D등급 7개사) 선정

□ 향후에도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구조조정 지속 실시

## IV. 향후 계획

- ◇ 채권단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상시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
- ◇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「정부내 협의체」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여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

### < 상사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>

-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
    - (주채무계열) 재무구조평가(4월),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(5월) 등을 통해 대기업그룹의 부실 위험에 선제적 대응
    - (개별기업) 엄정한 신용위험평가\*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·법정관리 등 추진
- \*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: 4~6월,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: 7~10월
- 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, 필요시 수시 신용위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

#### < '15년 채권단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>

- 대기업 :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(C등급 27, D등급 27)  
\* '14년(34개) 대비 59% ↑
- 중소기업 : 총 17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(C등급 70, D등급 105)  
\* '14년(125개) 대비 29% ↑

### < 구조조정 사후관리 강화 >

-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(신용평가사·회계법인 등)과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('16.1월)
-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

### <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 지속 추진 >

-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 지속 추진
  - \*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잉설비 해소 또는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시, 상법·공정거래법상 신고·인허가 절차 간소화, 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 제공
-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재입법 추진
  - 기촉법 개정안의 금년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기촉법 실효 가능성\* 이 높아진 상황
  - \* 현행기촉법 유효기간: '14.1.1일 ~ '15.12.31일
  - 기촉법 일몰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재입법을 추진

#### ※ 기촉법 재입법시까지의 대응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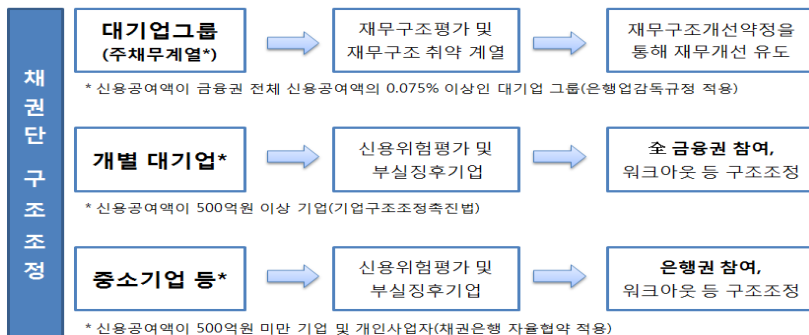
- 금년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내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조치
  - 주채권은행이 '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' 시 기촉법 계속 적용 가능
-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'자율협약'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

### <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>

- 취약업종 등 산업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「정부내 협의체」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 논의 예정

## 1. 기업구조조정 체계

-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대별
  - (법원 주도) 「통합도산법」(’06.4.1일 시행)에 따른 기업회생절차
    - \* 종전의 회사정리법, 화의법,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약칭 통합도산법)’로 통합 제정·시행
  - (채권단 주도) ① 주채무계열 제도,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, ③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대기업 그룹 및 개별기업(대기업·중소기업) 구조조정 추진
-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추진체계
  - ① 대기업 그룹 구조조정 : 주채무계열 제도(은행업감독규정)
    -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.075%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취약계열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(5월)
  - ② 개별기업별 구조조정(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협약)
    -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기업은 상반기(6월), 중소기업은 하반기(10월)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



## 2.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

### < 주채무계열 >

- '15년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평가('15.4월)
  - (선정 결과) '14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2,727억원\* 이상인 41개 계열을 선정(전년대비 1개 감소)
    - \* '13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(1,697조원)의 0.075%
  - (평가 결과)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 등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또는 정보제공 약정 체결('15.5월)
    - ⇒ 주채권은행은 약정 대상 업체에 대하여 자구이행(때분기) 및 약정이행 전반(때반기)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
- '15년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('15.12월)
  - (실시 개요) 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외부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('15.10월~)을 실시
  - (평가 결과) 11개 계열사가 현재는 정상이나 위기상황시 취약요인이 있어 선제적 자구노력이 필요
    - ⇒ 주채권은행은 이들 기업들에 대해 계열 스스로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

<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: **기촉법 적용** >

□ '15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

- (정기) **채권은행**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**500억원 이상** 대기업 중 57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**신용위험평가 실시**(‘15.7월)
  - 이중 3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(C등급 16, D등급 19)
- (수시) 총 368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**신용위험평가 실시**(‘15.12월)
  - 이중 19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(C등급 11, D등급 8)
- 정기,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합할 경우 총 54개사로 전년(34개사) 대비 58.8% 증가

<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 업체 현황>

(단위 : 개)

구 분	'12년	'13년	'14년	'15년
구조조정대상 업체	36	40	34	54
C등급	15	27	11	27
D등급	21	13	23	27

< 개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: **채권은행간 협약 적용** >

- **채권은행**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 중 1,934개 세부평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**신용위험평가 실시**(‘15.10월)
  - 이중 구조조정 대상 업체는 175개사\*(C등급 70, D등급 105)
- \* 전년(125개사) 대비 28.6% 증가

➡ 향후 워크아웃 대상(C등급)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,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,  
 - 부실기업(D등급)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 유도